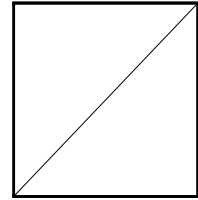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07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4. 22. (제 8 차)	

이니텍(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조치안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손 병 두
제출 연월일	2020. 4. 22.

## 1. 의결주문

이니텍(주)의 제19기(2015.1.1.~2015.12.31.)부터 제20기(2016.1.1.~2016.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이니텍(주)의 제19기(2015.1.1.~2015.12.31.)부터 제20기(2016.1.1.~2016.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이니텍(주)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 [‘15년 매출 5,442백만원, 매출원가 5,175백만원]
조치 내용 *1,*2,*3	○ 과징금(216.2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

※ 기퇴직한 前담당임원 ○○○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위반행위 발생 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낮아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을 적용하며, 별도재무제표 기준 중요도가 연결재무제표 기준 중요도 보다 높아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조치함

### \*2 동기판단

#### 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고의

- “실재성이 없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 표시하는 등 회계적 사실이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조작·누락시킨 경우” 및 “공인 회계사가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변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판단[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1.가.1,3)]

###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 기본조치의 가중 : 해당사항 없음
- 기본조치의 감경 : 1단계 감경
  - 회사는 혐의감리 착수 후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19.3.27.)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수정·공시('19.4.26.) 하였으므로 1단계 감경[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3.가.2)]

### 나. OO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 조치 없음

- 감사인은 아래와 같이 회계감사기준상의 감사절차를 적절히 취하였으며, 상기 지적사항은 회사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 매출 및 매출원가의 유형별로 월별 내역 징구 후 변동내역 등에 대한 분석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15년말에 상품 등 매출 항목이 급증한 사실을 파악한 후 매출의 실재성, 기간귀속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추가로 거래처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거래 사실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
- 한편, 상품중개 거래에서 회사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회사들의 거래에 개입하여 대금을 지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1~2%의 적은 이익률에 따른 마진을 상품 거래 소개업체에 지급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수준의 감사절차로는 파악하기 어려웠고,
- 선매출 건의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납품확인서를 요청하여 수령 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납품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의 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

## 4. 참고사항

가. 제15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19. 12. 12.)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1)

(별지1)

## 이니텍(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니텍(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이니텍(주)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0 000 00000000 00

###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의하여

- 이니텍(주)에 대해 과징금 216,2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 이니텍(주)은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 및 2022회계연도(2022.1.1 ~2022.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1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 이니텍(주), 前대표이사 000의 혐의사항을 각각 검찰에 통보한다.

### 3. 조치이유

#### 가. 지적사항

☐ 이니텍(주)(이하 '회사')는 제19기(2015.1.1.~2015.12.31.)부터 제20기(2016.1.1.~2016.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 등('15년 매출 5,442백만원, 매출원가 5,175백만원)
  - 회사는 매출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품거래 소개회사(甲社)로부터 상품거래의 매입처와 매출처 회사들(乙社·丙社)간의 상품중개를 소개받고, 소개받은 대로 상품을 중개한 후 이를 전액 매출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甲社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❶고객사(丁社)와 실제로 체결한 유지보수계약의 원가를 외주인력비 등으로 임의로 부풀린 후 동 부풀린 금액만큼 甲社에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❷甲社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보전해 준 사실이 있음
  - 또한, 거래처에 상품과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재화의 인도, 설치 및 검사 완료 등 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15년 말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15년) 및 과소('16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나. 근거법규

###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등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수익) 문단 14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등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붙임1)

## 관 계 법 규

### □ 「舊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략>

**제18조의2(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생략>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⑦ <생략>

## □ 「舊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의 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 7. <생략>
  - ② <생략>

- 제8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 ③ <생략>

- 제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 5. <생략>

③ ~ ⑧ <생략>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 15. <생략>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 법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이 조 제4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8. ~ 22. <생략>

③ ~ 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51조 (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개정 2004.6.16>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개정 2001.4.18>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 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증선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정황으로 보아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7. <생 략>

② <생 략>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 라. <생략>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 6.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회사 및 임직원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

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 3. 조치등의 가중·감경

###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감경사유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

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 ③ <생략>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의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4조 (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 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 ④ <생략>

**제4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와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 ⑥ <생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계량적 위반사항과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생략>

② ~ ④ <생략>

##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6조 (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4.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조사의 방법)**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은 시행령 제38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4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서제출요구 및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법 제4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3. 법 제4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의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4. 법 제426조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5. 법 제131조제1항·제146조제1항·제151조제1항·제158조제1항·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
7. 기타 당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 (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고발등)** 금융위원회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10.4.26. 신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제1018호 수익

**14**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제1018호 수익 적용사례

### 2 조건부로 선적된 재화

#### (1)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

보통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하고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재화의 인도를 수락한 시점에 즉시 수익을 인식한다.

##### (가)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한 경우: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이미 검사가 완료된 텔레비전 수상기의 설치와 같이 포장의 개봉과 전원 및 안테나의 연결만이 필요한 경우

##### (나) 이미 결정된 계약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

예를 들어, 무연탄이나 곡물 등을 인도하는 경우

#### (2)~(4) <생략>

## □ 「회계감사기준」

###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500 감사증거

-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명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20